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17, No. 105, pp. 389-400
https://doi.org/10.29212/mh.2017..105.389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서 평]

한러 군사관계의 체계적 이해

- 심헌용『소련의 대한반도 군사정책(1917~1948)』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2016) -

기광서*

한반도와 러시아의 관계는 러시아가 한반도에 접경 지역이 된 19세기 중엽 이후부터 긴밀하게 전개되었다. 구한말에서 일제 식민지 그리고 해방과 전쟁을 거치면서 러시아는 우리 역사에 뚜렷한 족적을 남겼고 많은 관련 기록을 양산하였다. 하지만 러시아의 대한반도 군사문제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는 다른 역사 기록에 비해 별로 눈에 띄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심헌용 박사가 쓴『소련의 대한반도 군사정책(1917~1948)』(2016)은 군사적 견지와 실제에서 한·소관계를 통찰적으로 살핀 저술로 꼽힌다. 이 연구서는 사회주의 혁명 이래 지속된 소련의 대한반도 군사정책을 시기별로 정리하고 있다. 전반부는 소비에트러시아가 외국의 간섭과 내전을 이겨내고 민족해방세력과 수행한 공동전선을 다루었고, 후반부는 1930년대 이후 동북아 국제질서의 전후 구상과 연동하여 소련의 대한반도 군사정책을 살피고 있다. 다만 본 주제 관련 서술의 상당 부분이 러시아혁명 관련 내용과 비군사적인 부문에 할애되고 있는데, 이것은 당시 소련의 대한

* 조선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www.kci.go.kr

반도 군사정책이 구체성이 결여된 사정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책은 저자가 이미 출간한 바 있는 『러시아의 한반도 군사관계사』(2002)와 『한러 군사관계사』(2007)를 발전시켜 군사정책을 중심으로 저술한 것이다. 이 두 저술이 근대 시기 러시아의 대외팽창의 군사적 동기와 군사전략의 측면에서, 그리고 한러관계에서 군사부문의 갈등과 협력을 다루었다면 『소련의 대한반도 군사정책(1917~1948)』은 소련의 군사정책이 한반도의 식민지 피압박 민족의 해방과 한국 독립문제에 어떤 방식으로 개입하였는지를 고찰하고 있다. 시간적 범위는 1917~1948년으로 소련의 형성과 북한의 건국 시기에 해당된다.

이 책은 당시의 귀중한 풍부한 사진 자료를 곁들여 편집되어 있기 때문에 시각적인 이해력을 높이는 데 큰 장점으로 작용한다. 저자가 책의 편집에 크게 주의를 기울였음을 알 수 있다. 이 저술은 모두 5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10월 혁명 이후 소련 성립까지의 군사정책으로서 식민지 해방과 독립을 추구한 한인 독립운동 세력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며, 제2장은 민족자결권에 입각하여 소비에트한인이 민족해방운동을 추구한 방식으로서 자치운동을 고찰하였다. 제3장은 1930년대 소련의 대극동 군사정책과 강제 이주 한인들의 참전 문제를 다루었고, 제4장은 제2차 세계대전 시기 대일전 참전을 전후한 소련의 한반도에 대한 정책적 입장을 검토하였다. 제5장은 소련군의 한반도 진주와 북한군 건설과정에서의 소련의 역할에 할애하고 있다.

이 책이 서술대상으로 삼고 있는 소련의 대한반도 군사정책 파트너는 한반도 내에 있는 권력과 특정세력에 국한되지 않는다. 소련에 거주하는 한인세력 또한 연구대상이 되고 있는데, 이는 이들의 지향성이 한반도의 이해와 맞물려 있기 때문일 것이다.

www.kci.go.kr

혁명 이후 한인 무장세력과 소련

책의 첫 부분은 주로 볼셰비키 혁명에 할애되었는데, 여기서 러시아 거주 한인의 동향이 주된 관심사가 되고 있다. 볼셰비키 혁명 직전인 1917년 5월 연해주 한인사회에서도 전러한인대표자대회가 열려 전러한족회중앙총회를 구성하였다. 이는 한인사회단체가 최초로 구성한 중앙집행기관이었다. 하지만 이 모임에 참가하지 않은 이동휘, 김알렉산드라, 박애 등 사회주의계 인사들은 하바롭스크에서 볼셰비키운동에 대한 한인 항일부대의 참여를 논의하고 러시아내 한인들이 참여하는 무장부대 양성을 독려하였다. 이때 한인 적위병 부대가 조직되어 볼셰비키 혁명과 연결되었다.

러시아혁명 후 서방국가들은 혁명을 좌절시키고자 무력개입을 단행하였다. 이 상황에서 저자가 보여주고자 한 대목은 볼셰비키 혁명 직후 극동의 한인상황과 일본의 간섭이었다. 1920년 4월 블라디보스토크에 상륙한 일본군은 독립의 근거지인 신한촌을 파괴하는 '4월 참변'을 일으켰다. 한인 지도자 최재형, 김이직 등을 비롯한 많은 한인 인사들이 학살당하였다. '4월 참변'이 전해지면서 국내외 동포들과 러시아인들 사이에서 일본에 대한 적개심이 고조되고 러일전쟁에 대한 전망과 더불어 독립전쟁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지만[1] 저자는 이 부분에 대해 크게 주목하지는 않았다. 다만 저자는 일본 제19사단이 두만강 대안의 소련군 및 항일독립군을 상대로 작전을 수행하고, 1920년 6월 봉오동, 10월 청산리 전투에서 패배한 이래 독립군 토벌에 집중한 점을 살폈다. 극동시베리아를 포함해 내전에서 소비에트러시아의 승리가 굳어지자 연합국 대부분은 1920년 1월 경 철수하지만 일본은 계속해서 잔류하였다.

1) 반병률「일제초기 독립운동노선논쟁-급진론과 완진론: 초기 상해 임시정부를 중심으로」『한국동양정치사상사연구』제5권 제2호, 2006, 123쪽.

www.kci.go.kr

러시아공산당은 일본과의 무력 충돌을 피하기 위해 1920년 4월 바이칼 인근 지역에 극동공화국을 수립했다. 극동시베리아를 일본 침략군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완충국을 설립하여 대응한 것이다. 극동공화국은 지역 정세를 감안하여 소비에트 체제가 아닌 부르주아공화국 형태를 취했다. 그렇다면 그 속에 존속하던 한인의 처지는 어떠했을까? 저자는 극동공화국의 불완전한 자율성은 자유시 참변에도 영향을 주었다고 한다. 즉, 이 사건은 코민테른 명령에 따라 한인무장세력이 소련 적군 편제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한인무장세력의 독립전쟁 가능성은 점차 퇴색되어 갔다는 것이다. 이후 러시아에 잔류한 한인독립군 부대는 고려혁명군이란 명칭으로 소비에트 적군 제5군단으로 편입되고, 고려특립연대로 하바롭스크 지역에 배치되어 러시아군 편제 하에 존립하였다. 또 다른 의용군부대는 한국의용군사회를 결성해 적군과 군사협정을 맺고 백위군 토벌에 참여했다. 이 부대는 공로를 인정받아 적군 특별보병대대로 개편되었으나 일본군 퇴각 이후 완전히 무장해제하였다. 이로써 러시아령 한인 독립군의 독자적인 군사활동은 백위군 토벌과 일본군 퇴각 이후인 1922년 10월 이후 적군에 흡수 내지 자체 소멸됨으로써 막을 내렸다.

저자는 모스크바지도부와 독립운동세력의 관계에 대해 무심히 취급하지는 않았다. 1919년 7월 한인사회당은 코민테른에 가입한 후 러시아로부터 400만 루블의 재정 지원을 받았고, 상해임시정부는 한형권을 특사로 파견하여 소비에트러시아와 대한민국임시정부 간의 비밀군사협정이 맺어졌다. 대일 한로 공수동맹으로 불린 협정문은 러시아의 한국 독립 지원, 러시아의 지휘를 받는 독립군대 설치, 러시아의 무기 공급 등을 규정하였다.

이 책은 모스크바 지원 자금이 한국 혁명운동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보았으나 사용 관할권 문제로 공산 계열과 민족주의 세력 간 불신과 적의를 낳는 부작용을 낳았다고 하였다.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대러 관계

www.kci.go.kr

는 독립전쟁 노선의 유지와 통일전선 이념이 공통분모를 찾을 때에만 가능했다. 그러나 한인독립운동 세력 내부의 분열 상황 속에서 더 이상의 협력 사업은 가능하지 않았다.

1920년대 초 소비에트 권력은 극동지역 거주 한인, 중국인 등 소수민족들을 예비혁명군이 아닌 지역소비에트화 정책에 적극 참여시킬 포섭대상으로 삼았다. 러시아한인들은 한명세를 중심으로 한인자치체 건설 구상을 하였지만 러시아 한인들이 자치지역을 얻어 견고한 한인사회를 형성할 경우 정보계통이나 스파이, 방첩대 등을 의미하는 '제5열' 지대로서 일본 첩보국의 영향력 속에 놓일 수도 있다는 러시아측의 우려 때문에 실현되지 못했다(84쪽). 이 책이 구체적으로 지적하지는 않지만 1937년 스탈린에 의한 한인 강제이주의 원인이 이미 예정된 셈이다.

고려인 학자 보리스 박의 입장을 수용하여 저자는 1921년 6월 자유시 사변에 대해서 코민테른의 지시를 거부하고 일시 무장해제와 부대 재편성을 거부한 대한의용군계 유격대원들이 자유시 수비대와 고려혁명군과 유혈충돌하면서 큰 희생을 당한 사건으로 보고 있다.[2] 희생당한 대한의용군계 한인 유격대원들은 극동공화국 정부의 입장을 옹호하였고, 식민지 조선의 해방을 위해 일본 본토에 이르기까지 무장투쟁을 전개하려던 세력들은 무장해제를 시도한 소비에트 권력을 이해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소련의 영향하에 있던 이르쿠츠계 한인공산당은 자유시 사변과 같은 비극적 사태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다.

저자가 러시아연방 국가문서보관소(ГАРФ)에서 발굴한 모스크바 한인노동자동맹의 정관은 노동자동맹의 주요 활동목적으로 "한인 노동민족의 정신적 힘이 자유로이 발전되고, 성립될 독립 조선사회주의 공화국의 형성(образование независимой Корейской Социалистической Республики)을 위해... 한인노동자동맹

2) Б. Д. Пак, Корейцы в советской России (1917 конец 30-х годов). М., Иркутск, С-Петербург, 1995, с. 72-93.

www.kci.go.kr

을 결성함에 있다"[3]고 밝혔다. 그러나 이 정관은 러시아 정부로부터 수용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해 러시아 정부는 대다수 한인들이 무국적자로 존재하는 현실에서 계급원칙에 따른 조직은 민족원칙에 따른 조직에 비해 다수 한인을 포함시킬 수 없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1924년 당시 한인협회가 민족인민위원회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당시 14만 7천명의 한인 중 14만 명이 극동지역에 거주하고 있었고 그 중 70%가 무국적 망명자들이었다. 한인 사회단체가 민족 원칙에서 전국조직으로 결성된다면 한민족을 한데 묶어 민족정책을 펴기에 적합할 것이었다. 1924년 6월 재소한인연합회(Союз корейцев, проживающих на территории СССР)는 한인노동자단체 회원의 전민족화, 단체 조직의 전국화를 목표로 재편하여 출범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이로 보아 소련 성립 직후 러시아가 한인 단체 조직에서 계급성보다도 민족적 접근을 우선한 것이며, 소련의 소수민족 정책이 단선적으로 표출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제2차 세계대전기 소련과 한인, 한반도

소연방은 성립 이후 시베리아에서 철병한 일본과 별다른 외교관계를 갖지 않았다. 그러나 1937년 8월 21일 소련은 적성국 일본의 신민이자 자국 내 소수민족인 극동지역의 한인을 국경 내 안보 위협요소로 간주하여 집단 이주시킴으로써 안정을 취하고자 하였다. 저자에 따르면, 이 조치는 가히 '인종말살(ethnocide)'라 불릴 정도로 폭압적이었으며, 소비에트 사회가 지향한 민주집중제적 합리성은 아예 작동되지도 않았다(108쪽). 위에서 언급한 한인이 '제5열 지대'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보

3) ГАРФ(러시아연방 국가문서보관소). Ф. 1318. Оп. 1. Д. 1204. л. 2.

www.kci.go.kr

다 현실적으로 작동한 것이다.

1930년대 후반 소 · 일간의 충돌은 저자가 제2차 세계대전과 연결한 매개점이었다. 중일전쟁 이후 소련은 만주 국경에서 일본과 군사적 대치에 있었고, 양측은 1938년 7~8월 하산호에서 사단급 전투를 벌였다. 소련은 일본군이 오래 전부터 장고봉을 차지하려 하산호 전투를 기획했다고 하는데, 여기에는 함경북도 나남에 주둔한 조선군 제19사단 병력이 개입되었다. 장고봉을 빼앗긴 소련군은 항공기 130대를 동원해 두만강 접경 조선 지역인 경흥, 증산, 고성의 거점과 철도까지 폭격하였다. 승부를 가리지 못한 하산호 전투는 러일전쟁 이래 일본이 처음으로 열강과 치른 사단급 전투였다. 저자는 하산호 전투 과정의 묘사를 통해 한반도 근방 지역에서 소일간의 군사적 충돌을 확인코자 하였다. 이와 함께 1939년 5~8월 할힌골에서 소일간의 대규모 충돌에 관한 서술이 이어졌다. 이 전투에서 처음으로 소련군은 일본에 대참패를 안겼다. 할힌골 전투에서 소련 적군의 막강한 군사력을 경험한 일본은 1940년 7월 소련에 일소 불가침조약 체결을 제의하였지만, 대신에 양국은 이듬해 4월 소일중립조약(蘇日中立條約)을 맺었다.

이 책이 주목하는 특징적인 지점은 제2차 세계대전 기간 소비에트한인의 참전 양상이다. 1941년 6월 독일이 독소불가침조약을 파기하고 공격해 오자 수천 명의 소비에트 한인들도 예외 없이 참전을 청원하였다. 많은 참전 신청서들이 거부되었는데, 이는 소련 권력기관이 한인을 불신하고 그들의 법적 권리와 이해를 축소시키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고려인은 소련 정규군인 노농적군(ＲＫＫＡ) 소속 군인으로 소집될 대상이 아니었기에 후방 노동전선과 산업전선에서 노무인력으로 동원되었다. 그러나 전선에도 372명이 직접 참전하여, 참전자 중 195명이 사망했거나 행방불명이 되었고 127명이 생환하였다고 한다. 전선에 간 개인들은 조사기관의 실수나 자신의 민족 적(籍)을 숨기거나, 타인을 대신해서 나섰던 경우들이었다고 한다. 한인 참전자 가운데 민 알렉산

www.kci.go.kr

드르(Min Aleksandr P.)는 혁혁한 전공을 세워 '소련 영웅' 칭호와 레닌훈장을 받았다. 저자는 전선에 투입된 소비에트 한인에는 남녀 구분이 없었고, 한인 여성들도 의사, 간호사, 문화활동가 그리고 노동자 신분으로 전쟁에 참여하였음을 지적하고 있다. 즉, 한인들이 직접 전투원으로 참전하는 경우는 적었더라도 많은 이들이 후방에서 "노무부대원으로 노역함으로써 전쟁 수행에 일조한 것은 또 다른 전선에서 적에 대한 승리를 보증한 공헌으로 평가되어야 한다"(138쪽)고 쓰고 있다. 소련당국의 차별적 취급에도 불구하고 제2차 세계대전에 소련 거주 한인의 참전 공로를 제대로 부각한 것이다.

한반도 진출 구상과 실제

소련은 제2차 세계대전기 한반도 문제에 대해 미국의 주도권을 인정하면서도 한반도는 다국적 신탁통치를 통해 특정 국가의 독점적 영향을 배제하는 방침을 1순위로 정했다. 이에 대해 이 책은 당시 소련의 대한정책이 사실상 부재했다고 하였는데, 그 이유로서 "식민지 한반도가 일본처럼 대적 군사활동을 수행할 직접적 대상도 아니었고 식민지 민족해방과 연계해 대한민국 임시정부나 혹은 조선공산당과의 접촉 내지 연합활동이 사실상 전무했기 때문"(154쪽)으로 보았다. 이 견해는 어느 정도 타당성을 갖지만 그렇다고 소련이 한반도의 지정학적 중요성을 간과했다고 보기는 무리가 따른다.[4)]

스탈린은 전세가 전환될 조짐을 보인 1942년 8월 처음으로 대일전 참전 의사를 표명하였다. 소련은 대일전 참전을 두고 미국과 줄다리기

4) 해당 시기 소련이 조선쪽 여러 세력과 연계 활동이 부재했다하더라도 이들의 동향을 주시하거나 관련 정보를 수집한 것은 향후 한반도 개입에 대한 준비의 일환이었을 것이다.

www.kci.go.kr

외교를 구사하여 러일전쟁에서 패배한 후 빼앗긴 영토와 이권을 되찾고자 하였다. 참전 조건으로 "소련은 최대한의 군수물자와 무기를 미국으로부터 얻고자 했으며 영토적 이해를 관철시켰다"(170쪽)는 다소 논쟁적[5]일 수는 있지만 진실에 부합한다고 본다.

저자는 소련의 전후 한반도 구상은 미국의 대일정책 일반에 동의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반영하는 수준으로 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미국의 국제신탁통치 입장에 따라 일정 기간 탁치를 거친 후 독립을 허용하는 입장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아쉽게도 나중에 이 입장이 변하게 된 이유를 미리 살펴보기는 쉽지 않다.

일본에게 선전포고 한 소련군은 1945년 8월 9일부터 북한지역에서 전투를 치루면서 각 도시에 진주하였다. 김일성의 항일유격대는 직접 참전하지 않았고 나중에야 귀국하였다. 이미 미국, 영국 등은 항일유격대에 대한 존재를 파악하고 있었다(200쪽). 다만 저자는 이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부연하지 않았다. 러시아 자료에 따르면, 항일유격대 가운데 조선공작단에 배속된 인원은 60명 정도였다.[6]

소련의 대외 군사원조의 활동은 다양하였는데, 소련제 군사장비 및 무기에 대한 지원, 외국군 간부 및 군사전문가 양성, 군사기술 협력, 군사작전 계획 수립 및 전시 공동보조, 참전을 통한 직접 지도 등이 있었다. 이는 북한에 진주한 소련군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었다. 저자는 해방 후 소련군이 북한 통치체제 정비와 더불어 북한 무력 건설을 지원하였음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그 가운데 무력기관 형성은 김일성의 적극적인 요청에 소련측이 화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저자는 군사고문단이 정치장교로서 활약한 것을 강조하는데, "단순히 군사분야 전문가가 아니라 정치장교로서 두 국가의 군사현안을 직

5) 스탈린은 미·영과 협의 당시 참전 조건을 모두 획득한 것은 아니었다. 뤼순, 대련항의 조차 등은 중국과 협의 사항이었고, 가장 관심이 많았던 홋카이도 분할 통치 요구도 실현되지 못했다.

6) ⅡAMO(러시아 국방성중앙문서보관소), ф. 2, оп. 19121, д. 2, л. 14.

www.kci.go.kr

접 해결하기 위해 임무를 수행했다는 측면"을 살피고 있다(210쪽). 1946년 8월 소련 정부는 북한으로 군사고문단을 파견하기로 결정하고, 제25군에서 장성 3명, 장교 343명을 차출하였다. 1946년 중반 북한에는 보안간부 훈련대대부라는 군대 조직이 편성되어 있었다. 이 조직은 북한의 최초 정규 무력기관으로 인민군의 전신이었는데, 이곳으로 소련 군사고문단이 집중 배치되었다. 소련 군사고문단은 보안간부 훈련대대부 산하의 각 훈련소와 군사학교에 배치되어 신병 훈련과 간부 교육을 지원하였다. 저자는 이를 소련 군사고문단의 주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한편으로 소련군의 철수 후에도 잔류한 군사고문단은 기갑, 포병, 정보 등 북한군의 특수전 수행을 위한 전문가 양성을 지원했다.

소련은 북한의 통치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소련계 한인들로 당정군 등 각 분야 전문가를 파견하였다. 저자는 소련 거주 한인들을 북한 지역에 파견한 것은 소련의 대외(군사)활동의 일환으로 "소비에트 군사고문관 내지 군사전문가를 현지에 파견하여 직접 전문가를 양성하고 조직하는 시스템"이 작동된 것으로 보고 있다(211쪽). 이와 아울러 스탈린이 직접 1946년 5월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에서 각각 100명씩의 소련계 한인들을 조선 파견을 위해 선발하도록 하였음을 예시하고 있다.

몇 가지 문제

이 책은 전반적으로 사료 발굴을 통해 새로운 사실에 접근하기보다는 기존의 연구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해당 주제에 천착한 연구성과이다. 이 점이 이 저술의 약점이지만 한편으로는 사료적 접근 방식으로 도달할 수 없는 분명한 논점 제기와 쟁점 정리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책이 갖고 있는 몇 가지 문제점을 덧붙일 필요가 있다.

www.kci.go.kr

첫째, 이 책의 구성은 볼셰비키 혁명에서 해방 후 소련군의 북한 주둔에 이르기까지 시계열적 전개와 분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각 시기별로 소련과 한반도의 관계에서 주체간의 상호작용이 잘 드러나고 있지만 본 주제에 대한 소련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그리고 개념적으로 정리하는 데 미흡함을 보였다. 독자들은 어떤 저술이든 압축적으로 표현되는 개념적 정의와 구절로써 이해하기를 원할 것이다.

둘째, 이 책이 1917~1948년 소련의 대한반도 군사정책에 관한 것이지만 정작 이 기간은 한반도에는 온전한 국가가 존속하지 못하던 때였다. 따라서 군사정책의 대상은 국가가 아닌 독립운동세력, 소련 거주 한인, 일본 그리고 해방 후 북한 등 다양한 대상을 망라할 수밖에 없었다. 이 때문에 대상과의 관계에 대한 서술이 다소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각 시기별 서술에서 관련 정세와 국제관계에 대한 서술이 상대적으로 많은 분량을 차지하면서 심도 있게 주제를 파고 드는 데 다소 어려움을 겪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책의 전반부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셋째, 이 책의 구성상 1940년대 전반 김일성 그룹의 소련 체류와 제88독립보병여단, 그리고 이 부대의 활동에 대한 기술은 반드시 필요했다고 본다. 김일성 그룹에 대한 서술에 일정한 제약이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지만 해방 전후 소련 군사정책의 주요 대상의 하나가 항일유격대 그룹이었다면 이에 대한 접근과 분석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넷째, 저자는 소련군의 대북한 통치의 성격을 군정통치로 규정하고 있다. 즉, 소련군의 북한 진주 후 “정치는 형식에서는 민정부를 통한 간접통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군정통치를 실시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근거로는 소련이 설치한 민정부로부터 “민정이란 군대의 민간관련 업무를 일컫는 군사용어이기 때문에 군정과 다를 바 없었다”(203쪽)는 것을 제시한다. 그러나 간접통치가 어떻게 군정통치로 규정되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부족하다. 이 논거를 정확히 제시하고자 한다면 엄밀한 정치이론적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

www.kci.go.kr

이와 같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이 책이 해당 시기 소련과 한반도 관계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주고 소련의 대한반도 군사정책을 포괄적으로 이해하는 데 길잡이 역할을 능히 할 수 있다는 데 크게 이의를 달기는 어렵다.

www.kci.go.kr